

PJ2

동강댐 갈등 해소 과정과 교훈

송문곤*, 우형택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과학과

1. 서 론

1990년대 들어 다양한 국제회의와 협약, 각종 환경문제의 이슈화는 국제사회가 기존의 성장위주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환경위주의 패러다임으로 급속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 '친환경적 개발' 등과 같은 새로운 개발 개념은 환경과 개발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이후, 환경부의 위상이 높아지고, NGO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심인성, 2001). 이런 가운데,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2001년)의 일환으로, 97년 댐 건설 예정지로 공식 발표되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동강댐 건설 계획이 2000년 6월 5일 전면 백지화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개발의 이익보다 환경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 첫 번째이자 대표적 사례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환경적 위상이 더욱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 동강일대의 폭우에 의해 동강댐 건설 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 2000년 동강댐 건설 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지역내의 갈등, NGO의 개입에 의한 갈등의 확산, 정치권의 개입으로 인한 갈등의 해소로 이어지는 일련의 전개과정을 통해 나타난 현상과 찬반의 입장에 따른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동강댐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의 교훈과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강댐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까지의 전개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강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신문기사를 고찰하였고, 현지방문(2003. 8. 26~28)을 통해 인터뷰와 관련자료를 수집하였다.

2. 본 론

2.1. 동강댐 건설 계획 배경과 문제의 제기

2.1.1. 동강댐 건설 계획의 배경

동강댐으로 잘 알려진 영월댐의 건설 논의는 1990년 9월 9일부터 12일까지 강원 영월, 충북 단양, 경기도 김포 등 한강 상·하류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영월과 단양지역이 침수되자 지역주민들과 강원도가 정부에 댐 건설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정부는 한강 중·하류지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댐 하류부의 홍수피해를 경감하며, 수력발전 시설에 의한 전력자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91년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동강댐의 건설 계획을 포함시켜 91년에서 97년까지 타당성 조사 등 사전검토작업을 거

처 97년 9월 댐 건설 예정지를 공식 발표하게 되었다(Fig 1).



Fig 1. 동강댐 건설 예정지

2.1.2. 문제의 제기

동강댐 건설의 문제는 동강댐 건설 계획의 초기부터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불어지기 시작했다.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은 1992년 7월 동강댐 타당성 검토를 종료하고 이듬해 4월에 동강댐 건설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는 군의원을 비롯해 주민 1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당시 수몰 예상지역의 주민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 사회기반시설 사업투자 기피, 이농현상 등의 피해를 이유로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영월댐 공동조사단, 2000). 그 외에도 정선읍 번영회, 정선 청년회의소, 군 번영회 등을 중심으로 서명운동, 반대시위 등의 활발한 반대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이러한 반대움직임은 댐 건설 예정지에서의 여타 반대운동과 같이 매우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보상을 둘러싼 지역적 문제로만 여겨질 뿐이었다(오은정, 2003).

동강댐이 본격적으로 사회적 쟁점화가 된 것은 1997년 9월 22일 건교부가 댐 건설 예정지를 고시하면서 부터이다. 건교부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97년 9월 댐 건설 예정지를 고시하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의 환경·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쟁점화 되기 시작하였다.

이 와중에서도 건교부와 수공은 댐 건설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댐 건설 강행의사를 거듭 밝히게 되고, 동강댐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은 국민적 지지를 얻으며 크게 확산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학계·종교계·문화예술계 등 각계 각층에서 댐 건설 반대성명이 잇따랐으며, 그린피스, 시에라클럽 등 국제 환경단체들도 댐 건설 반대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하는 등 동강댐 문제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환경이슈로 부각되었다(김선빈 외, 2001).

2.2. 주요 쟁점 사항과 갈등의 전개과정

2.2.1. 주요 쟁점 사항과 입장

2.2.1.1. 주요 쟁점 사항에 따른 입장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개발론과 보존론에 따른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개발가치와 환경가치의 대립과 또, 대립에 따른 세부적 입장 차이에서 오는 쟁점들을 들 수 있다.

우선, 개발가치와 환경가치의 대립 문제를 살펴보면, 이는 가치 판단의 문제임으로 어느 한쪽이 흑이 되고 반대쪽이 백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Table 1).

Table 1. 동강댐 건설과 관련한 개발가치와 환경가치의 대립(김종길, 2001)

구 분	개 발	보 존
이 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뭄대비 및 물부족 해결 · 한강의 홍수피해 예방 · 신규 고용 창출 · 댐 하류의 주변 환경 및 수질 개선 · 새로운 생태계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의 상업적 소득 · 생태관광적 가치 · 하천의 정화작용 · 학술조사, 탐조활동 등 비 소비적 이용 ·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 제공
비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생태계 변화 및 파괴 · 향후 댐의 안전 문제 · 이주민 발생과 주민생활 기반 상실 · 자연 경관 및 문화재 훼손 · 비경 수몰 · 예산 낭비 · 지역공동체 파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 조절 문제 미해결 · 물 부족 사태 심화 · 잠재적 고용창출 기회 감소

다음으로, 세부적 사항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2. 쟁점에 따른 입장의 차이

구 분	개 발 론	보 존 론
홍수 예방	· 갈수기와 홍수기에 맞춰 저수량을 조절하므로 가능하다.	· 다목적 댐은 평상시 물을 채워 놓고 있어 홍수를 대비할 수 없다.
수자원 확보	· 캠페인, 물값 인상, 노후관 교체 등의 문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 정부 자료의 신뢰성이 없고, 노후관 교체, 물 절약 캠페인, 물값 인상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생태계 파괴	· 일부 동식물의 서식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멸종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희귀동식물의 서식처 등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다.
비경수물	· 수몰선이 낮고, 수몰지역도 비경의 모형 보전 등으로 상쇄될 수 있다.	· 백룡동굴, 어라연과 같은 비경을 수장시켜서는 안된다.
댐의 안정성	· 정밀조사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지하누수의 가능성도 적다.	· 건설 예정지의 대부분이 석회암지대로 붕괴 가능성이 높음 · 지진 다발지역이며 석회암동굴이 많아 지하누수 가능성이 높음

이처럼 동강댐 문제는 처음부터 개발론과 보존론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2000년 6월 동강댐 건설계획이 백지화되는데 까지 많은 정책적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보여 주었다.

2.2.1.2. 주요 쟁점 사항의 조정

환경부와 건교부의 지속적 이견과 유관기관의 부정적 견해의 증가, 환경 시민단체의 조직적 반대 등 개발론과 보존론의 대립이 지속되자 중앙정부부처의 상위기관인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활동에 나서게 된다(주재복 외, 2001).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의 물관리정책 민간위원회에서는 지속된 논쟁을 매듭짓고, 동강댐 건설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조사하기 위한 영월댐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게 된다.

공동조사단의 주요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3).

Table 3. 공동조사단의 분과별 결과

분 과	결 과
물 수급 분과	물 절약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다목적 댐 건설과 더불어 추가 수자원의 개발과 물 절약 유도정책 병행 필요
홍수 분과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였으며, 다른 분야의 결과에 따라 검토
댐 안전 분과	조사기간이 짧아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며,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듯하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환경 분과	생태적으로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생태계를 지니고 있어 보존의 가치가 충분하며, 앞으로 생태관광지로 활용하는 것이 국익에 더욱 도움이 됨.
총 합	각 분과의 조사 결과 많은 논란은 있었지만 기존의 보고서를 번복할만한 결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생물종다양성, 독특한 석회암 생태계 등 환경적 가치가 탁월하여 후손을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2.2.2. 갈등과 해소과정

동강댐 건설 계획 백지화의 전개과정을 크게 시간에 따른 전개과정과 정책 참여 구조 변화에 따른 전개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2.1.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과정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2.2.2.1.1. 잠재적 갈등 시기 (90. 9 ~ 97. 10)

이 시기는 동강댐 건설 계획이 발표되고, 동강댐 건설 예정지가 공식 발표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으로 수몰 예정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동강댐 건설 반대 운동이 이루어졌다.

당시 수몰 예정지역 주민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 사회기반시설 사업투자 기피, 이농현상 등의 피해를 이유로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영월댐 공동조사단, 2000). 그 외에도 정선읍 번영회, 정선 청년회의소, 군 번영회 등을 중심으로 서명운동, 반대시위 등의 활발한 반대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이러한 반대움직임은 댐 건설 예정지에서의 여타 반대운동과 같이 매우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보상액을 둘러싼 지역적 문제로만 여겨질 뿐 전국적으로 쟁점화 되지는 못했다(오은정, 2003).

2.2.2.1.2. 갈등의 심화기 (97. 10 ~ 99. 2)

이 시기는 동강댐 건설 예정지가 공식 발표되고, 환경·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반대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건교부는 동강댐 건설 강행의지를 꺾지 않지 않고 있었다.

동강댐 건설 예정지의 공식 발표는 동강댐의 건설문제를 한 지역의 문제에서 전국적 쟁점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 내 반대 운동도 전국적 관심에 힘을 얻어 더욱 조직화되었고,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우이령보존협회 등의 환경·시민단체의 개입과 전국적인 반대운동으로 동강댐 건설 계획의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된다. 하지만, 건교부와 수공은 합동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댐 건설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기존의 방침을 꺾지 않는다.

2.2.2.1.3. 갈등의 조정기 (99. 2 ~ 99. 8)

이 시기는 건교부의 동강댐 건설 강행 발표에 반대운동이 극에 달하게 되고 결국, 건교부장관의 신중 추진 발언을 이끌어 낸다. 또, 강원도 지사가 반대의사 표명을 하고, 그린피스, 시에라클럽, 지구의 벗 등의 국제 환경·시민단체의 반대 메시지가 정부에 전달된다.

건교부 장관의 신중 추진 발언 후, 건교부와 환경부의 국정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은 동강댐 건설 시사 발언을 하고(99. 4. 7), 그 다음날 강원도 지사는 연구와 검토가 부족하여 추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설의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게 된다. 이후, 주요 국제 환경단체들의 동강댐 건설 반대 메시지가 전달되는 등 갈등의 해소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2.2.2.1.4. 갈등의 해소기 (99. 8 ~ 00. 10)

이 시기는 대통령이 처음으로 동강댐 건설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영월댐 건설 공동조사단의 동강댐 건설계획 백지화의 최종 연구발표로 2000년 6. 5일 대통령 선언에 의해

동강댐 건설계획은 백지화되었다.

99년 8월 초 강원지역 4개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처음으로 사건을 전제로 동강댐 건설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동강댐의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영월댐 건설 공동 조사단의 최종 연구가 동강댐 백지화로 발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대통령 선언에 의해 1990년에 시작된 동강댐 건설 논쟁은 끝을 맺게 되었다.

2.2.2.2. 전개과정에서의 주요 정책 참여자의 역할

동강댐 건설 계획을 둘러싼 갈등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새로운 정책참여자의 개입에 따라 갈등이 전개된다. 따라서, 주요 정책 참여자인 지역주민, 환경 시민단체, 수질개선 사업단(국무총리실), 정치권의 개입에 따른 전개과정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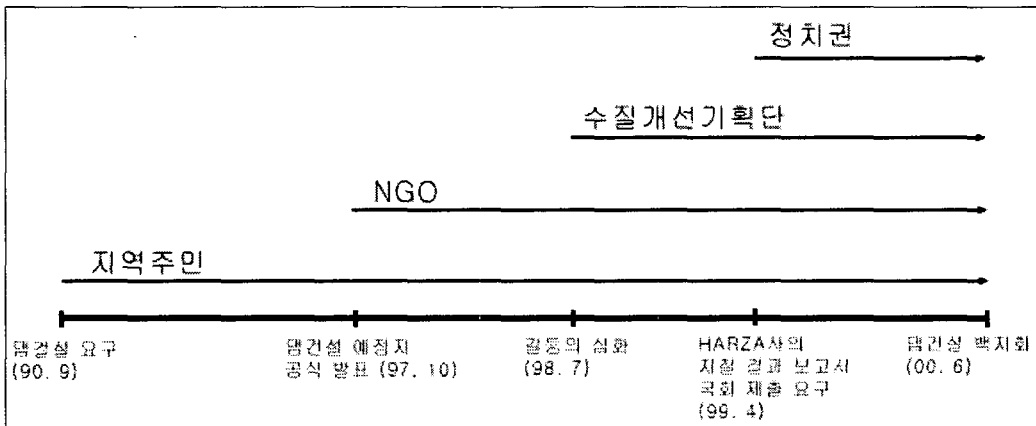


Fig 2. 주요 정책참여자들의 개입 시기

2.2.2.2.1. 지역주민

지역주민은 1990년 9월 동강댐 건설 요구와 함께 정책 참여자로 나서, 댐 건설이 백지화 될 때까지 정책의 참여자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동강댐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입장이므로 가장 중요한 정책 참여자로 볼 수 있으나, 이들의 갈등과 의견은 크게 표면화되지 못하였다. 이들은 동강댐 건설계획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수물지역 주민과 군의회 등이 반대운동을 펼쳐왔지만,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했으며, 댐 건설 예정지의 공식 발표 후에도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분히 쟁점화 되지 못했다.

2.2.2.2.2. 환경·시민단체

환경 시민단체는 1997년 10월 동강댐의 건설 예정지가 공식 발표되자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이들의 개입은 동강댐의 건설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표면화하는 계기가 된다.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우이령보존협회와 같은 전문적 환경운동 조직의 개입은 동강댐 건설 반대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은 동강댐 백지화를 위한 수공 규탄대회, 결의대회, 성명서 발표 등의 시위활동을 전개

하는 한편, 댐 건설의 문제점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모아 언론에 홍보하고, 방송 프로그램에 공동 참여하는 등의 언론을 통한 동강의 홍보에도 힘을 기울였다. 또, 이들은 각계의 전문가들과의 연결망을 통해 국정감사, 국회환경포럼 등과 같은 조직에 각종 전문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오은정, 2003). 이처럼 환경 시민단체들의 개입으로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은 조직화·체계화되었으며, 동강댐이 백지화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2.2.2.3. 수질개선기획단(국무총리실)

환경 시민단체의 개입으로 한층 심화된 동강댐 건설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중앙정부부처의 상위기관에 해당하는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활동은 시작하게 된다(주재복 외, 2001). 먼저,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는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98. 7. 14), 그 결과를 건교부와 환경부에 통보하지만,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그 후에도 수질개선기획단은 수 차례의 조정활동에 나서지만, 의견의 차이를 좁히는데 번번히 실패하였다.

2.2.2.2.4. 정치권

여러 차례의 조정활동에도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정치권이 개입하게 된다. 1999년 4월 1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들은 수공에 댐의 안전성문제를 지적한 HARZA사의 지질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요구하는 등 직접적 개입에 나선다. 이러한 가운데 4월 8일, 강원도 지사의 댐 건설 불가입장 표명 기자회견은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충청북도의회, 강원도내 18개 시·군의회, 평창군의회 등의 반대의사를 이끌어 내게 된다.

여기에 4월 20일에는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시에라클럽, 지구의 벗 등이 동강댐 반대의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하는 등 동강댐 건설 반대의 목소리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강원도 지역의 전반적인 반대 움직임과 국제 환경단체들의 압력은 영월댐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조사단의 결성에 계기가 되었다(오은정, 2003).

이후, 8월에는 대통령이 사건을 전제로 댐건설 반대 표명을 하였고, 그 달에 영월댐의 건설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 위한 영월댐 건설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재검토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00년 6월에 동강댐 건설 백지화를 이끌어 내게 되었다.

3. 결론 및 고찰

3.1. 동강댐 건설 백지화 과정의 교훈

1996년 동강댐 건설계획이 세워지고, 2000년 백지화를 선언하기까지의 전 과정은 대규모의 국책사업에서 개발의 이익보다 환경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 첫 번째이자 대표적 사례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환경의 위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 여겨진다. 또 그만큼 동강댐 건설 백지화까지의 전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1) 환경과 개발이라는 새로운 갈등 요소가 등장하게 되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동강댐 백지화는 개발의 가치보다 환경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 첫 번째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의 결정에 있어 환경과 개발이 새로운 갈등의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2) 환경·시민운동의 가능성과 국민들의 환경의식의 수준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강댐 건설 백지화의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은 환경·시민단체는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국민들의 높아진 환경의식과 환경·시민단체의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에 의해 계획만 세우면 결과로 이어지던, 기존의 국책사업을 중도에 백지화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

3) 민·관 합동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동강댐의 백지화는 동강댐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된 '영월댐 건설 공동조사단'의 최종 연구결과에 의해 확정하였다. 이처럼 정책 참여자들의 갈등이나 분쟁이 심화되었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합동조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4) 새로운 물 관리 정책으로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동강댐을 둘러싼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댐 건설 백지화의 대안 중 하나로 수요관리 위주의 물 관리 정책이 거론되었다. 이제까지의 물 부족에 대해 공급일변도에서 수요를 관리하여 물의 사용을 절약하는 방법인 새로운 물 관리 정책 도입에 기여하였다.

5) 국책사업의 시작단계에서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동강댐 건설의 문제는 시작단계에서부터 댐의 안정성과 환경적 영향 등 많은 부분에서 갈등의 요소를 제공하였다. 또, 건교부의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에 의해 수 차례 보완 요청을 받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책사업에서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와 조사가 있어야겠다.

6) 동강댐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이 부각되지 못했다.

한 지역에서 사업의 진행에 있어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공익을 내건 환경과 개발의 논쟁에 묻혀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분한 쟁점화 되지 못하였다(김선빈 외, 2001).

3.2. 새만금사업과 동강댐의 비교 고찰

동강댐 건설문제를 두고 갈등이 한참 심화될 무렵, 또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얼마전인 2003년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 안 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본 안 사건 선고 전까지 전면 중단되는 등 '새만금사업의 중단'이 힘을 얻는 듯 하였지만, 7월 18일 노무현대통령의 새만금사업 조속 진행 발언에 새만금사업은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두 사업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고, 사회적 관심과 인식에 있어서도 시급한 환경

과제로 평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강댐 건설과 새만금사업은 다른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동강댐 건설과 새만금사업을 비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추진 동기 면에서 살펴보면, 동강댐은 1990년 9월, 집중적 호우에 의해 정부가 홍수조절과 수자원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한 반면, 새만금사업은 추진 동기에 있어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 13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노태우 후보가 87년 11월 12일 새만금사업을 제외한 “새로운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개발전략”을 발표 후, 지역 여론의 반응이 나빠지자, 12월 10일 전주 유세에서 새만금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게 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사업의 진척도면에서는 동강댐의 경우, 1990년부터 백지화가 이루어지는 2000년까지 타당성조사와 같은 기초단계의 진행 외에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새만금의 경우, 꾸준히 지속된 사업의 진행으로 1999년 5월에 이미 1조원 이상이 투자되어 방조제 공사가 60%나 진행되었다. 이는 공사가 중단된다면 막대한 기회 비용과 복구비용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정화, 2001).

대립의 구조에 있어서도 양쪽은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동강댐의 경우 개발부서인 건교부와 수공 대 국민적 지지를 얻은 환경·시민단체와 환경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대립구조를 보인다. 또, 갈등이 심화되자 건교부는 수그러든 자세를 취하고, 대통령까지 반대의사를 표명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의 대립구조는 건교부,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전북도 대 환경부, 해양수산부, 환경·시민단체로 여러 정부기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 농업기반공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고, 지방정부에서도 새만금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한 얼마 전 대통령의 조속 추진 발언은 찬성의 입장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지역의 여론 면에서는 동강댐의 경우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큰 힘이 되어 백지화를 이끌게 되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의 경우 지역주민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하며, 특히 지방정부는 전북도지사가 지사직을 걸고 찬성하고 있으며, 도의회가 환경·시민단체의 반대에 맞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초강경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공동조사단의 결과에서도 두 사건이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우선, 동강댐의 경우 안정성, 수자원 확보, 홍수 예방 등의 문제에서는 이견이 많았으나, 환경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최종적으로 백지화로 결론이 모아졌다. 하지만 새만금의 경우,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파행 운영을 거듭하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원점에서 해산하고 말았다(정정화, 2001).

이처럼, 새만금사업과 동강댐 건설계획은 환경과 보존의 대립이라는 관점과 갈등의 시기 등에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참여의 구조와 전개과정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 김남희, 2001, 한국 환경운동 패러다임의 비판적 분석 : 동강살리기 운동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빈 외, 2001, 한국 사회 갈등구조에 대한 연구.
- 김종길, 2001, 패러독스의 도전과 정책과정에서의 패러독스활용 전략 :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3), pp. 83~108.
- 박 휘, 1999, 생태관광 도입을 통한 동강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은정, 2003, 환경의제의 사회적 의미 구성과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환경기자클럽, 2001, 연어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 궁리출판사.

<http://www.dongriver.com/>

<http://www.karico.co.kr/saemangeum/>

<http://www.nongbalge.or.kr/>

<http://www.yw.go.kr/>